# 北,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거부

## 노동신문 "李대통령 북남관계 악화 책임 회피 위한 얕은 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연락사무소 설치방안 자체를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비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동신문의 이런 언급은 이 대통령이 방미 중인 지난 17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요술은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새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남조선의 선임자들이 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만들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로 들고 나왔다가… 오물장에 처박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같이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이명박 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반북) 대결을 정책화하면서 6·15 이후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을 뒤엎으려" 했고 그 결과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북남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규탄이 세차게 터져 나왔다"면서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은 "그의 불안감과 초조감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은 "나오자마자 내외의 반대 배격을 받고 휴지장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명박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요술을 걷어치우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바로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일자무식쟁이", "정치몽유병환자", "얼뜨기"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썼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티벳 문제를 옹호하던 캐나다인과 이를 비난하는 중국 유학생이 격렬하게 말다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대·환영 시위 곳곳 충돌

## 베이징 올림픽 성화 서울 봉송…경찰 8천명 배치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이 이뤄진 27일 시내 곳곳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정책 등에 항의하는 시위와 성화의 서울 도착을 환영하는 친(親)중국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성화 봉송에 반대하는 탈북자 인권 단체 등과 국내 체류 중국인들이 가담한 친중국 시위대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22면〉

성화 봉송 행사 시작을 3시간 앞둔 오전 11시 10분께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을 해 온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씨와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가 반중국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몽촌토성역 입구에서 중국 유학생들로 보이는 친중국 시위대 100여명에게 20여분간 둘러싸였다.

친중국 시위대는 폴러첸씨와 최씨를 둘러싸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중국 사랑해', '중국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이 투입되자 해산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의 서경석 목사 등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시민연대' 회원 180여명은 오후 1시께부터 올림피아나 관광호텔 앞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 모여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과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 30여명은 자전거를 타고 성화 봉송 주자의 행렬을 따라 가려다 경찰에 막혀 행렬 참여를 포기했다.

인근 올림픽공원에서 성화 봉송 출발이 이뤄진 후인 오후 2시 30분께는 반중국 시위대와 성화 봉송을 환송하기 위해 나온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국인들이 충돌을 빚어 경찰이 양측을 떼어 놓았다.

시위대는 서로 고함을 지르다가 플라스틱 물병, 각목, 돌 등을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 일간지 사진기자가 날아온 각목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오후 2시 55분께는 성화 봉송로 중 신천역 인근 코스에서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47) 가산 디지털단지 역장이 주자로 뛰는 순간 탈북자 장모(33)씨가 뛰어들어 성화 봉송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곧바로 끌려나갔다.

또 역삼역 인근에서 시너통을 들고가던 북한인권단체 회원 2명이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에게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다 체포됐다.경찰은 이날 성화 봉송 경비를 위해 모두 8천여명의 경찰관과 전·의경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 민간행사 참가 8명 방북 불허

## 통일부 "국가 안보·공공질서 저해 우려"

정부가 지난 25일 남북교류 행사에 참석하려는 민간 인사 8명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햇볕정책 10년'과 다른 길을 가려는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 교류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금강산에서 26~28일 열리는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42명 중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관계자 6명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관계자 2명 등 총 8명에 대해 방북 불허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측은 이들 8명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또는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방북을 불허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방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불허 결정이 내부 지침에 근거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하에 내려진 것으로,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통일부 측은 밝혔다. 방북 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통상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유관 부처의 '방북불가' 의견이 참고 사항 정도로 넘어간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눈에 띄는 변화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않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민간 교류를 위한 방북 신청에 대해 허용 및 불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통일부는 방북 허가를 할 때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참여정부때는 북한 핵실험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반대하는 인사에게 방북이 허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탈레반, 아프간 전승 기념식장 공격

# 대통령 등 각료 수백명 피신

탈레반이 27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전승(戰勝) 기념식 행사장을 공격해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駐)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현지 시각)께 카불 시내 가지스타디움에서 열린 소련 침공 격퇴 16주년 기념행사 도중 괴한들이 귀빈석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고 로켓추진 수류탄을 투척했다.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아프간 국가 연주가 시작될 즈음 행사장 맞은 편 건물에서 시작된 총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과 정부 각료, 현지 주재 외교 사절단 등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의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다쳤지만 카르자이 대통령을 포함한 귀빈들 대부분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은 성명을 통해 "카르자이 대통령과 각료들은 물론 행사에 참석했던 현지 주재 외교과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사건발생 직후 TV에 출연해 자신이 무사함을 확인시키며 "다행히 보안군이 재빠르게 그들을 포위해 공격에 가담한 사람 중 몇명을 검거했다"며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경찰과 군은 괴한들과 총격을 통해 일부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발생 직후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